

데 이 콤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박원순변호사

수신 : FAX/8225229994(박원순변호사)
 발신 : !KR/DACOMHS/CHOLLIAN//J1116
 송신 시각 : 94/08/23 10:22
 수신 시각 : 94/08/23 11:16
 메시지 ID : 0000142217
 제목 :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위로금'안!

송신자 : J1116 (윤미향)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민간기금을 통한 견무금(한국말로 해석하면 동정금, 구제금)을 전달할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계획에 대해 본회는 지난 8월 22일(어제) 오후 2시에 긴급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단체와 필리핀 단체, 그리고 정대협이 연대성명서를 22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의 반대를 위한 여론형성과 국민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 일시는 8월 30일(화), 오후 3시에 종로성당(예정)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정신대할머니들도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민간기금[위로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에 대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써 일본내 민간모집 형식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종전의 입장인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하에 민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무관계에 한정하여 출자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년내에 세워, 실현가능성이 확실해지면 전후 50년을 향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민간기금 '위로금' 안을 철회하고, 개인배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무라야마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민간기금을 통한 [위로금]지급안은 과거 미야자와 정권때부터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 미야자와 정권때 일본정부의 기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안에 대해서도 이미 반대입장을 표해 왔다. 그리고 위로금은 우리 국민이 지급한다고 하여 92년 12월, 정신대할머니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국내 민간모금을 실시, 위로금을 지급한바 있다. 일본의 민간단체나 개인도 그들의 나라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나서서 '민간모금'을 통한 [위로금]지급을 운운하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수이다. 일본정부는 [위로금]안을 철회하고, 범죄행위에 마땅한 배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무라야마 총리 사죄편지는 국회결의 사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위로금과 함께 무라야마 수상 이름으로 사죄의 편지를 생존자 개인에게 보내는 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도 계속 요구해 왔던 사실이고, 과거 미야자와 정권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전된 사죄표시로써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일본국회내에서 과거전쟁에 대한 반성과 개개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결의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일본수상들이 공식석상에서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표시를 했지만 최근 나가노 법무부장관과 사쿠라이 환경청장관 등의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수상의 개인의 사죄는 내각의 각료들에 의해 도전받고, 부인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무라야마 수상의 사죄편지는 일본국회의 결의를 통해 일본전체의 사죄로 표현되어야 한다.